

2014년 6월 21일 시행
지방직 사회 기출문제해설

문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주제] 행정구제제도 – 민원의 이해

[해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이다.

민원에 대산 신청과 통지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문 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 ① 0.4
- ② 0.8
- ③ 1.2
- ④ 2.5

[정답] ①

[주제]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frac{\Delta Q}{Q}}{\frac{\Delta P}{P}}|$ 로 계산한다. 씨앗호떡의 가격

이 1,000원에서 850원으로 150원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300개에서 318개로 18개

증가하였으므로 씨앗호떡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frac{+18}{300}}{\frac{-150}{1000}}| = 0.4$ 이다.

문 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창조적	←	업무
유연적	←	과정
협력적	←	관계
네트워크	←	구조
	→	반복적
	→	기계적
	→	폐쇄적
	→	피라미드

-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정답] ③

[주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비교

[해설] (가)는 팀제(탈관료제)이고 (나)는 관료제이다. 부서 간 경계가 엄격하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대표적인 사회조직(공식조직)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있지만 변화에 둔감하여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빠른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에는 조직의 유연함을 그 특성으로 하는 팀제가 적합하다.

문 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 왜 옳지 않아?

갑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 ① 보통선거
- ② 평등선거
- ③ 비밀선거
- ④ 직접선거

[정답] ②

[주제] 민주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와 차등선거

[해설] 민주선거의 원칙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등이 있다. 갑은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라고 하였으므로 보통선거를 인정한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평등선거를 불인정하고 차등선거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 ③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정답] ③

[주제]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이해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의 보호 및 생활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는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양성평등권, 사회보장권,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이 극대화 된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인정되었는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 되었다.
③ 국민이 개별적으로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통상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실현된다.
④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열거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문 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
|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
|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

<보기>

- | |
|--|
|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
|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
| ㄹ. (갑)과 (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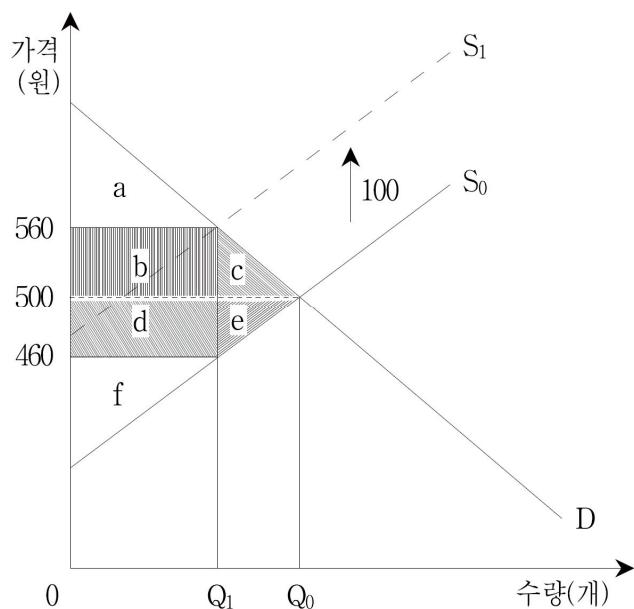
[정답] ③

[주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기능론과 갈등론의 비교

[해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이 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이 있고,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사회화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가치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갑)은 기능론의 시각을 갖고 있고, 사회화를 통해 특정 계급의 사상이 주입된다고 여기는 (을)은 갈등론의 시각을 갖고 있다.

ㄹ.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문 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_0 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_1 이다)



-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 d$ 가 된다.
-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 e$ 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정답] ②

[주제] 정부의 조세 부과와 조세의 귀착

[해설] 정부가 공급자(기업)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공급자는 기존의 공급곡선을 100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500원에서 Q_0 만큼 판매되던 X재는 560원에서 Q_1 만큼 판매되게 되었다.

-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b 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d 이다.
- ② 과세 전 소비자 잉여는 $a+b+c$ 였지만, 과세 후에는 a 로 감소하였다. 또한 과세 전 생산자 잉여는 $d+e+f$ 였지만, 과세 후 f 로 감소하였다.
- ③ 정부의 조세 부과로 결국 $c+e$ 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 ④ 본래 500원에서 거래되던 X재를 소비자는 60원 비싸게 사게 되었고, 생산자는

100원의 조세를 납부한 뒤 460만 받은 셈이 되어 한 단위당 40원을 손해보게 되었다.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인데, 이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문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①

[주제] 범죄 성립의 요소

[해설] 범죄 성립의 3요소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자신의 차에 방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할 수 없다.
- ② B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나,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아들의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교육상의 목적으로 보편적 상식의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체벌을 가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문 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

[정답] ③

[주제] 계급설의 이해

[해설] 마르크스의 계급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구성체론에 따르면 법, 정치, 종교 등의 상부구조는 물질적 생산양식이 속하는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므로 물질적 생산양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단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주제] 평등의 이해 –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해설]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상대적·비례적 평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능력 또는 노력의 결과를 차등하게 인정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차별의 범주에 해당하여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ㄱ.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술팀에 대하여 특별 상여금을 주는 것이 배분적 정의이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만 하는 여성들을 배려하여 여자 화장실의 총면적을 더 넓게 만드는 것이 배분적 정의이다.

문 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①

[주제] 국내법과 국제법의 비교

[해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지만, 별도의 입법기관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제성이 미약하다. 국제법의 종류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 국제법의 효력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 때 국내법은 법률인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문 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①~④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	활동 내용
6월 3일 오후 4시~6시	①□□배드민턴 동호회 시합
6월 3일 오후 7시~10시	②△△고등학교 총동문회 모임
6월 4일 오후 2시~4시	③○○자동차 노동조합 간담회
6월 5일 오후 6시~7시	④○○재능기부 시민연대 정기 총회

- ① ①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 ② ②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 ③ ③은 ④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 ④ ①~④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정답] ④

[주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구분

[해설] 공통의 이해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집단인 자발적 결사체에는 비공식조직은 물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동호회 등의 공식조직 일부가 포함된다.

- ① 배드민턴 동호회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② 토니스는 집단을 결합의지에 따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하였다. 공동사회는 '본능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집단이고, 이익사회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집단이다. 총동문회는 선택적 의지에 의해 결성되므로 이익사회에 속한다.
- ③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으로서 사익을 추구하고, 시민단체의 하나인 재능기부 시민연대는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문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 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었다.

-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답] ②

[주제]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의 이해

[해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을 바탕으로 군주제의 모순을 타파할 수 있다
고 믿은 정치사상은 계몽사상이고, 계몽사상은 사회계약설의 형성과 시민혁명의 발
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근대 초기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의 달성이 중시되었다.

문 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답] ④

[주제] 민주주의의 의미 – 매키버의 견해

[해설] 매키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을 통해 민주주의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평
화적인 권력의 교체가 가능한 정치체제로 규정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여부를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넷째,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
는가?

다섯째,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
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문 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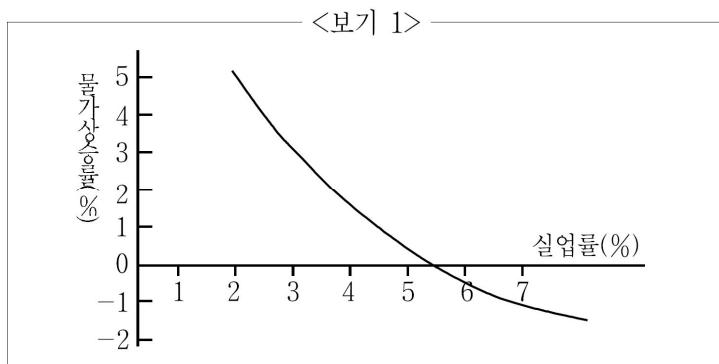
[정답] ③

[주제] 국제수지의 산출

[해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하고 투자수지는 자본·금융계정에 속한다.

- ① 상품수지는 미국에 수출한 휴대폰 +10억 달러, 칠레로부터 수입한 -2억 달러로 계산한다. 따라서 상품수지는 8억 달러 흑자이다.
- ② 금융계정에 해당하는 투자수지를 보면 독일로부터의 차관 +5억 달러, 영국에 투자한 -4억 달러가 있으므로 1억 달러 흑자임을 알 수 있다.
- ③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8억 달러에 서비스수지에 속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입 +3억 달러를 더해 총 11억 달러 흑자이다.
- ④ 이전소득수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문 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보기 2>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에 처했었다. C국도 이 여파로 1980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을 경험하였다.

-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정답] ③

[주제]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해설] <보기 1>은 필립스 곡선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기 2>는 필립스 곡선의 예외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

다. 케인스는 필립스 곡선을 바탕으로 호경기 시에는 물가가 높은 대신 실업률이 낮으므로 물가를 낮추고 일정 정도 실업의 증가를 용인하는 긴축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논리로 불경기 시에는 실업률이 높은 대신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확장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일정 정도의 물가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높고 실업도 높아 케인스의 주장을 적용할 수가 없다.

문 17. 민법 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불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②

[주제] 특수한 불법 행위의 이해

[해설] 특수한 불법 행위에는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 등이 있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지만 나머지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른다.

- ① 종업원 B가 놀러 가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는 A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B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A의 공작물이 불교되었으므로 A에게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B 대신 점유자인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애완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④ A와 B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 불법행위 시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문 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정답] ①

[주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해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이 있다. 제시 문은 사회적 행위자인 개인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 부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구분 정부 형태	A	B
장점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	(가)
단점	(나)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정답] ①

[주제] 정부 형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해설] 표의 설명으로 미루어 A는 대통령제이고 B는 의원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 ①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파에 의해 행정 수반이 선출된다. 따라서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하다. 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소야대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의회와 행정부 간에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②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임기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그러나 군소정이 난립할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므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 ③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 고유의 특성이다.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은 비

교적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므로 독재화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④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무조건 여대야소가 형성되므로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시 해결이 용이하다.

문 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연도 구분	2012년	2013년
고용률(%)	65.7	62.3
실업률(%)	5.2	5.2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보기>

-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주제] 실업 통계의 이해

[해설]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가 일정한 상황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므로 취업자의 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자 수의 감소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실업자의 수 역시 감소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가능인구가 일정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